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관련 기사 11, 12면

마르크스주의자 역사가 도니 글렉스틴
에든버러대학 교수 초청 강연
파시즘, 어제와 오늘
— 역사 속 나치와 오늘의 재등장

3면

노동자들은
급진적이
될 수 있는가?

4~5면

특수고용 노동자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11, 12면

출국 가로막힌
이집트 난민들,
인천공항 노숙 항의

2면

노동자 투쟁
화물연대 등

11면

온라인 기사

- 알제리 반정부 시위
- 남아공 혁명적 좌파정당 탄생
- 한반도 정세 변화 조짐

출국 가로막힌 난민들, 인천공항 노숙 항의

독일 메르켈의 국경 통제로 국제 미아된 이집트 난민들

이현주

이집트 출신 난민 가족 9명이 4월 10일 현재 3일째 인천공항에서 노숙 중이다.

이들이 한국에 온 지 2~3년이 됐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팍팍해 독일로 떠나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독일 국책항공사인 루프트한자가 탑승을 거부해 출국이 가로막힌 상황이다. 이 가족은 항의하면서 루프트한자 체크인 카운터 옆에서 노숙 중이다.

이 가족은 이집트 엘시시 군사 독재 정권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도망쳐 나왔다. 9명 중 5명은 미성년자다(2세, 8세, 12세, 15세, 17세). 아직 기저귀도 떼지 않은 두 살배기 아기도 있다.

루프트한자는 독일 출입국의 결정이라며 탑승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들이 난민인 것을 알고 입국을 거부한 것이다. 이들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난민 신청을 할 계획이었다.

최근 유럽 정부들은 들어온 난민들을 강제 추방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아예 난민 유입을 막으려 한다. 난민을 태우고 온 항공사에 벌금을 물리는 것도 그 방법 중 하나다. 항공사들이 자국형 비행기에 승객을 태울 때 알아서 난민을 거르도록 하는 것이다.

독일은 난민 100만 명을 받아들여 ‘난민의 나라’인 양 여겨진다. 그러나 독일의 경제 규모에 견주면 독일의 난민 수용은 궤궤직한 수준이다. 최대 무역흑자국인 독일이 우간다(경제 규모 세계 92위)보다도 난민을 적게 받아들였다.(우간다 140만 명, 독일 100만 명)

무엇보다 독일 지배자들은 ‘요새화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 두 살배기 아이가 차가운 맨바닥에서 잠을 청하고 있다

된 유럽’을 만드는 데 선봉에서 왔다. 가령, 난민들이 경유하는 국가인 터키와 리비아 등에게 난민 유입을 차단하라고 요구해 왔다.

독일 정부의 이집트 난민 탑승 거부 는 ‘난민에 대한 국제적 책임’ 운운하는 메르켈의 위선을 보여 준다.

루프트한자는 탑승을 거부하며 독일이 아닌 두바이를 경유해 이집트로 가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이집트 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짓이다. 티나(17세)는 “두바이로 가면 이집트로 송환될 것이다.

우리는 이집트로 가면 죽을 수도 있다” 하고 말했다.

현재 이집트는 엘시시 정권의 잔혹한 통치가 계속되고 있다. 매년 수백명이 납치·살종되고, 고문이 대놓고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2017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3월 사이에만 30명이 군사 법정을 통해 처형됐다.

티나의 삼촌 중 한 명도 이 정권 하에서 살해됐다고 한다. 공항에 앉아 있던 다른 삼촌은 경찰이 쏜 총에 입은 팔뚝의 총상을 내보였다.

그런데 한국 경찰들은 탑승 거부에 항의하는 이집트 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난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이 체크인 카운터 앞에 주저 앉아 항의하자, 경찰 10명과 공항보안요원 5명이 몰려왔다. 그리고 2~3명이 난민들을 한 명씩 붙잡아 카운터 바깥으로 끌어 냈다고 한다.

한국 경찰의 조롱·폭력

이 과정은 매우 폭력적이었다. 몇몇 난민들은 상처를 입었다.

경찰과 보안요원들은 반말이 기본이었다. 난민들이 경찰들의 만행을 카메라로 찍으려 하자 손가락으로 ‘브이’자를 해 보이며 조롱하고, “이집트에서도 이렇게 개기냐?” 하며 막말을 했다. 공포에 질려 어린아이들은 울었다.

이런 인종차별적인 행태가 바로 “평화”와 “인권”을 운운하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런 행태는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의 눈치를 보는 데서 비롯했을 것이다.

이집트 난민들은 왜 한국을 떠나려 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살기 힘듭니다. [한국에서 사는] 3년 동안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티나의 삼촌은 울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일할 수 있는 날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뿐이었다고 한다. 체불 임금도 400만 원이나 됐다. 그중 100만 원밖에 못 돌려받은 상태다.

이 가족의 성인 4명 중 2명은 법적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살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진정한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짜 난민

을 걸러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완전한 위선임을 보여 준다.

오죽하면 난민들이 2~3년 만에 한국을 떠나겠다고 나선단 말인가. 한국 정부는 난민(신청자)들을 형편없이 대우함으로써 난민들이 못 견뎌 스스로 한국을 떠나게끔 만들고 있다.

루프트한자 항공사는 탑승을 거부해 놓고도 아직까지 티켓 대금을 돌려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총 1150만 원이나 되는데 말이다. 심지어 이 중 400만 원은 빚진 돈이다. 이들은 이제 “남은 돈도 없고, 돌아갈 집도 없다” 하고 말했다.

머물 수도 떠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한 이 난민들은 맨몸으로 차가운 공항 바닥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다. 티나는 “난민 신청 도움 주고, [난민을] 괴롭히지 않는 나라로 가고 싶다. 그런 곳이 어딘지 모르겠다” 하고 말했다.

난민들이 이런 비참한 처지로 내몰리는 것은 각국의 국경 통제와 난민 배척의 직접적 결과다. 보호받아야 할 난민들이 국경에 가로막히거나 간신히 들어가더라도 곤궁한 처지에 내몰리며 다시금 다른 나라를 떠돌아야 하는 것이다.

국경을 열라는 요구는 ‘지금, 여기’ 난민들을 위한 가장 절박한 요구다.

이집트 난민 입국을 거부한 독일 정부를 규탄한다. 한국 정부의 폭력과 인종차별 만행을 규탄한다. 티나 가족이 부디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 정부는 박해와 가난, 전쟁을 피해 온 난민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주 영리병원 시간 버는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

장호중

제주도지사 원희룡은 4월 9일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청문 기간을 예정보다 늘릴 것임을 내비쳤다. “헬스케어타운 사업 전체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 추가 검토가 있을 수 있다.”

영리병원 허가 취소에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다.

원래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법에 정해진 개원 시한(3월 5일)을 넘기자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며 4월 초에는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얘기해 왔다. 영리병원 반대 운동과 광범한 반대 여론이 맞물린 결과다.

3월 26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그동안 영리병원 반대 운동 측이 제기해 온 많은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녹지그룹은 청문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제주도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계획도 없는 녹지그룹을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여



의료 영리화 추진 문재인이 박근혜 정부의 악행을 이어받다

추진하게 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자신들은 “아무런 의료시설 운영 경험도 없었는데 JDC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무기로 의료기관 개설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또 “개설 허가절차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련 전문 업체들과의] 업무협약 추진도 일체 중단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보면, 의료

시설 운영 경험은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제주도 측이 법도 어겨가며 영리병원을 유치하려 했다는 얘기다.

청문회 내용이 워낙 적나라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희룡에게 허가 취소 외에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런데 또 시간을 끌며 핏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뭘 믿고 이러는 걸까?

노동계급과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와 자본가들의 눈높이에서 사태를 보면 그 이유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를 포함해 전임 정부들이 추진하던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이어, 얼마 전 3월 국회에서도 의료기기와 제약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두 개나 통과시켰다. 4월 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통과시키려 한다.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자 기업 이윤을 위해 새로운 투자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자본주의 논리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노동 존중’도 ‘소득 주도’도 내팽개치고 친기업 일변도로 나선 이유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말을 아껴 왔다. 제주 영리병원 문제에 개입했다가는 애써 자본가들에게 얻은 신뢰를 까먹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오히려 영리병원이 세워진다면 자기 손을

터럽히지 않고도 의료 영리화 정책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정을 아는 원희룡은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를 붙들고 늘어졌다. 녹지국제병원은 원희룡을, 원희룡은 문재인 정부를 물고 늘어지는 꼴사나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원희룡은 이번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청와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와 논의했는데 결국 책임있는 논의가 나오지 못했다”며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졌다.

이 점에서 3월 임시국회에서 문재인 의 의료 영리화 법안 통과를 막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원희룡은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보며 문재인 정부를 붙들고 늘어지는 게 살 길이라는 생각을 했을 법하다.

법도 어겨가며 추진된 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당장 취소돼야 한다. 의료민영화저지법국본과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원희룡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항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정의당 여영국 의원

4.3 창원 성산구 선거 결과를 두고 정의당의 승리가 민주당의 승리인 것은 아니다

김문성

더불어민주당은 4월 3일 재·보선 직후 “민주진보개혁 단일 후보인 [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승리는 우리 당의 승리나 마찬가지”라고 논평했다.

바로 뒤에서 살피보겠지만, 이런 아전인수 해석은 재·보선 참패의 충격을 감추고 단일화를 빌미로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내려는 의도이다.

“앞으로 여 후보가 ...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위한 민생 정치에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같은 논평)

언론들은 서로 다른 속셈으로 정의당 여영국 의원의 당선을 “범여권 후보의 당선”으로 취급한다. 친민주당 측은 자유한국당의 상승세를 가리려고, 우파 언론은 노동계 진보 정당이 당선한 의미를 깎아내리기 위해서이다.

민주당은 애초 이번 재·보선(국회의원 2곳과 기초의원 3곳)에 후보 4명(국회의원 2곳과 기초의원 2곳)을 냈다가 창원에서 중도 사퇴해 총 3명이 완주했다. 이 후보들 모두 큰 표차로 떨어졌다.

그런데 바로 이 선거구들 대부분이 (경북 문경군을 빼면) 지난해 전국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크게 선전했던 곳들이다.

창원 성산구와 통영시·고성군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나 허성무 창원시장 모두 크게 앞섰었고, 이 지역 기초

의원 선거구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은 한국당과 1~2위를 다투며 대부분 당선되었다. 통영시장과 고성군수도 민주당 차지였다.

그런데 1년 만에 민주당은 이곳들에서 참패하고 심지어 창원에서는 (군소 정당이라고 무시하던 정의당에 밀려) 단일 후보도 못 뒀던 것이다.

물론 이 지역구들에서 전통적으로 한국당이 강세였고 지난해 지방선거가 예외였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다. 유시민이 이런 주장을 펴다.

그러나 그런 분석은 한국당이 전통적 강세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세력을 회복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부분적 답일 수는 있어도 민주당의 이번 재·보선 참패가 별일 아닌 것처럼 볼 근거는 못 된다.

누군가는 노무현 정부 말기의 악몽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총선에서 민주당 계열 정당으로는 44년 만에 첫 과반수 여당이 됐다가 이후 선거마다 참패하고 분당되기까지 하며 몰락했다.

이번에 민주당은 호남에서도 패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기초의원)도 지난해 민주당 당선 지역구였으나 이번에 민주당후보가 크게 이겼다.

최근 문재인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 기록을 매주 경신하는 상황이다. 1년 새 바뀐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이 단일 후보였다면 창원에서도 한국당이 이

겼을 것이다. 정의당이나까 지지를 더 받은 것이다. 정의당조차 강한 ‘반문재인 정서’ 때문에 어렵게 이겼다.

자업자득

정치 상황이 크게 바뀐 것은 경제 침체가 더 심해지고 북·미 회담이 틀어진 탓도 있지만,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스스로 박근혜가 하던 노동개혁과 친기업 규제 완화를 이어받으며 촛불 염원을 내팽개친 탓이 결정적이다.

게다가 이전 정부들과 다를 바 없는 부패도 계속 보여 준다. 가령 부동산 잡겠다고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이 10억 원 넘게 대출을 받아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빌딩을 샀다. 이런 일들을 청와대 간부가 옹호하기까지 한다.

바로 이런 일들을 배경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우파가 반사이익을 얻어왔다. 당의 공식 논평과 달리, 당대표인 이해찬이 “겸허, 엄중, 무거운 책임감” 식으로 말을 아낀 이유다. 그 와중에도 ‘책임감 있게 노동개혁에 앞장서자’고 말한 것은 이당이 어느 계급에게 책임지는 당인지를 드러낸다.

요컨대, 지금 국면은 경제 침체와 지정학적 불안정 속에서 공식 정치(정부와 국회)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는 한편, 노동자 투쟁이 활성화되고 중도파 정부는 약화되며 우파 지지율은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는 좌우 양극화 추세가 현 상황의 배경임을 보여 준다.

물론 우파 회복 탓에 한국당 정치인들의 망발을 더 많이 보게 된 것은 불쾌한 일이다. 이번 재보선 결과를 두고 바른미래당의 한국당 출신들이 동요하고 내분을 겪는 것도 이런 상황의 반영인 듯하다.

다만 아직 위기의 추세들이 무르익진 않은 듯하다. 반사이익을 얻은 한국당의 회복 추세가 아직 불안정하다.

한국당은 패배한 선거였던 2016년 총선 수준 정도에도 다시 이르지 못했다. 당 지지율은 지난해 말부터 상승세지만, 아직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초기 수준이고, 한 달째 정체 상태다.

여러 망언 소동에서 보듯, 중도층에서조차 반우파 정서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러 비리 문제로 황교안, 홍문종, 김성태, 권성동 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편 창원 성산 선거는 노동 정치 기반이 닦여진 곳에서는 노동계 출신 진보 정치인이 우파의 맞상대로 나서 선택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이는 시사적이다.(아마 이 때문이라도 주류 양당은 선거제 개혁에 더 열의가 없어질 것이다.)

그동안 이런 양극화는 공식정치(국회 내 공방이나 선거 등)에서의 현실적

인 이유 때문에(승자독식 소선거구제 등)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결로 이 양극화가 왜곡돼 반영돼 왔다.

이번에 민주당이 얻을 수 없었을 표를 정의당이 얻은 건 민주당의 개혁 배신과 노동개혁에 실망하고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지지 덕분일 것이다.

물론 정의당에 투표한 노동자들 중 비중 있는 일부는 꽤 고심하다가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정의당과 민중당의 단일화가 안 된 점, 그런데 정의당이 민주당과 단일화해 버린 점, 그럼에도 한국당의 부상을 막아야 한다는 점 등 사이에서 말이다.

따라서 민주당과 협력해 선거제 개혁과 적폐 청산 개혁을 이뤄 보겠다는 정의당 지도자들의 딜레마가 더 커질 듯하다. 어떤 지역은 민주당과의 공조나 선거 단일화가 득표 계산에서도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최근 3년간 치러진 전국 선거에서 정의당 득표가 상승한 것은 직간접으로 노동자 운동의 활성화 덕분임을 정의당 지도자들은 직시해야 한다.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것에 더 진지해져야 한다.

좌파는 노동자 투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공식정치 지형의 우경화와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진보·좌파 정당들 중 어디를 지지하던 현장에서 함께 투쟁을 건설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종교동교회 | ☐ 기타) _____

[선택] 휴대전화번호 _____

회비약정액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주세요

《노동자 연대》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 ★ 안드로이드 앱 플레이스토어에서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 ★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로 검색 (“신문”을 팔로우하셔야 합니다)
-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선택 후 Start 버튼
- ★ 트위터 @wspaper



노동자들은 급진적이 될 수 있는가?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점진적 개혁만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는 지도적 운동가(이하 개혁주의자)들은 노동자 대중의 의식이 급진적이 될 수 있음을 대체로 믿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종종 노동자 대중을 꺾보는 듯한 태도로 대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경향이 있다.

물론 **얼핏 보면** 노동자들의 의식은 동질적인 것처럼 보이고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도 **보인다**. 그리고 보수적 관념을 가진 노동자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은 탄력근로 확대나 최저임금 개악 등 문재인이 추진하는 친기업적 정책들에 반대하고, 그들의 일부는 더 나아가 좌파적 대안을 지지한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의 의식이 동질적이고 정태적인 게 아니라, 개혁주의자들이 여론조사나 미디어 등을 통해 아는 노동자 상(像, 이미지)이 동질적이고 정태적인 것이다. 노동자들의 의식은 계속 변한다. 좌회전하기도 하고 우회전하기도 한다.

부분적으로 일부 문제를 놓고 변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1987~1989년 노동자 투쟁을 겪으며 수많은 노동자 의식이 급격히 변했다

노동자들의 의식은 변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어느 노동조합 활동가의 사례를 들고자 한다. 그는 맑시즘 2018 첫날 개막 강연에서 우리 단체 연사들의 발제가 문재인 정부를 너무 세게 비판한다 싶어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연말에 그의 노조 송년회에서 만난 그는 “솔직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 크게 실망했다”고 토로했다.

때때로 이런 의식 변화는 전면적으로 일어난다. 가령 1987~1989년 노동자 투쟁의 급격한 고양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의식 전반이 바

뀌었다. 이제 수많은 노동자들이 더는 몇 년 전의 그가 아니었다.

그래도 1990년대 초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를 추잡하고 숨겨야 하는 ‘변태’로 여겼다. 그러나 요새는 노동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변해,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사람들도 적지 않고, 동성 결혼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다.

지난해 실시한 한국궤협의 설문조사를 보면, “동성애자 커플에게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34퍼센트가 찬성, 58퍼센트가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2001년 조사에서는 같은 질문에 17퍼센트가 찬성했고, 67퍼센트가 반대했었다. 찬성 의견은 갑절로 늘어났고, 반대는 67퍼센트에서 58퍼센트로 9퍼센트포인트 줄었다.

특히 20대 청년들의 의식 진보가 두드러진다. 20대의 3분의 2인 66퍼센트가 동성 결혼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노동자들의 의식이 한국의 경우보다 훨씬 급격하게 변한 사례가 많다. 1914년 제1차세계대전 개전 당시에는 애국주의 열풍이 유럽을 휩쓸었다. 그러나 2년 남짓 지나자 애국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어졌고, 전쟁은 1917년 러시아 혁명 같은 거대한 저항을 불렀다.

이런 의식 변화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한다. 노동자들이 성차별적이고, 성소수자 차별적이고, 자본주의를 거부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인상이 여전히 상식이 돼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식자층 속에서 이런 엘리트주의적 편견이 강하다.

이런 엘리트주의적 편견은 **관념론**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관념론이란 관념이 변하는 이유를 사람들의 물질적 생활조건에서 찾지 않고, 지식인들과 사상가들의 관심 · 생각 · 사고방식 · 마음의 변화에서 찾는 관점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람들의 물질적 생활조건이다

이런 견해를 두고 유물론이라고 하는데, 상식과 반대되므로 깊이 유념해야 한다. 특히, 지배계급은 자기네의 ‘탁월한 사상’과 ‘탁월한 리더십’이 역사의 방향을 결정했다고 믿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믿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장례식에서 낭독한 조사(弔辭)에서 엥겔스는 물질적 조건을 지식의 출발점으로 보는 유물론이 마르크스의 두드러진 업적이라고 지적했다. “마르크스는 인간이 우선 의식주를 마련한 후에야 비로소 정치 · 과학 · 예술 · 종교 등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는 단순 명쾌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6월항쟁과 7~8월 대파업이 일어났던 1987년 이전에 한국 노동자들은 거의 전대일 평전에 묘사된 청계파복 노동자들만큼 열악한 조건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들은 거의 20년 동안 치열하게 싸워 ‘의식주를 마련’했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말한 “정치 · 과학 · 예술 · 종교 등에 대해 비

로소 고민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

그러나 곧 2008년 경제 공황과 뒤이은 장기 불황에 직면했다. 경제 상황이 이런 지 어느덧 10년 남짓 됐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이명박근혜”로 불리는 9년에 걸친 강성 우파 정부의 공격을 받았었다. 그러나 마침내 2016년 말에는 민주노총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반격에 나서 박근혜를 쫓아내고 심지어 그와 이명박을 감옥에 가뒀다.

그 뒤 문재인에게 크고 작은 기대를 걸었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경험했고 이후 이명박근혜 하에서도 사기가 저하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문재인에 대해 아마 “혹시나 했는데 역시로군” 했을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겪어 보지 못한 비교적 젊은 노동자들은 문재인에게 큰 기대를 걸었지만 지금은 환상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이렇듯 의식은 물질적 조건들(경제 상황, 정부 경제정책 등)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면, 노동자 의식은 어떻게 진보할 수 있을까?

지배계급은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래서 경제를 지배한다. 덕분에 지배계급은 사회적 의식에 비대칭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친다. 게다가 지배계급은 경제뿐 아니라 초 · 중 · 고 학교, 대학, 언론, 출판사, 교회 등도 지배한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했다.

“언제나 지배계급의 사상이 지배적 사상이다. 물질적 생산수단을 지배하는 계급이 동시에 정신적 · 지적 생산수단도 지배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말해, 정신적 생산수단이 없는 계급의 사상은 지배계급의 사상에 종속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의 대다수는 사회가 다르게 조직될 수도 있음을 알지 못한다. 우리의 대다수는 기존 시스템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특히, 경쟁도 당연시하는 나머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고립돼 원자화된 느낌을 갖고 산다.(학생과 미조직 노동자는 특히 그럴 것이다.)

이 때문에 대중은 쉽사리 보수적 관념의 영향을 받는다. 지배계급은 자기네의 언론과 학교와 정당, 교회 등을 통해 보수적 관념을 더욱 부추긴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가 기업의 이윤과 수익성에 온전히 달려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지배자들은 임금 삭감과 법인세 감면을 쉽사리 정당화할 수 있다.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존재가 우리 일자리와 임금을 위협한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지배자들은 이주노동자와 난민 천대를 더욱 쉽게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관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보수적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실제

로는 보수적 관념을 통째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문재인 정부를 사실상 변호해 왔고, 조 · 중 · 동과 경제지들은 문재인을 오른쪽에서 비판해 왔다. 하지만 많은 노동자들은 이들 주류 언론들이 요구하는 팬가르기에 고스란히 넘어가지는 않았다.

관념의 충돌

이처럼, 사람들의 관념은 단순히 사회 체제의 영향만을 받는 게 아니라 사회 내에서 그들이 처한 위치의 영향도 받는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세계관은 사용자들과 정부 관료들의 세계관과는 좀 다르다. 노동계급도 자신의 경험과 이해

관계를 근거로 자신만의 사상과 세계관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 발전이 계급 내부적으로 불균등하지만 말이다.

노동자들의 의식이 사회 체제의 영향도 받지만 그들이 처한 조건의 영향도 받은 결과, 대다수 노동자들은 모순되고 혼재된 관념을 갖고 있다. 가령 경영자가 수십 배 연봉을 받는 것이 불법적 방법이나 비도덕적인 방법에 의하지만 않는다면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자들 머릿속에 서로 충돌하는 생각들이 공존하는 것이다. 이 상충하는 생각들 사이에 이뤄진 균형은 때때로 급격하게 변한다.

노동자들의 의식 변화는 노동자들이 경험을 통해 얻은 관념과, 지배계급이 언론과 교육 등을 통해 그들에게 주입한

관념이 서로 충돌할 때 일어날 수 있다.

다시금 제1차세계대전의 사례를 들면, 개전 초에 노동자들은 전쟁에 열광했다. 이는 주요국 지배계급이 전쟁 전 여러 해 동안 제국주의적 · 국수주의적 선전을 해낸 것의 영향이었다. 그러나 전쟁은 참혹했고, 그래서 전쟁을 영광스럽다고 찬양하는 지배계급의 선전은 금세 힘을 잃었다.

그러나 이렇게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을 때만 지배계급의 관념이 힘을 잃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이 능동적이고 집단적으로 저항할 때도 지배계급의 관념은 힘을 잃는다. 집회, 파업, 점거 농성 등으로 기업주와 정부에 맞서 싸우면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자각한다.

▶ 5면으로 이어짐

대우조선 정규직 노조,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

민영화 반대 원하청 단결 투쟁을 바란다

대우조선지회가 올해 요구안에 사내하청 노동자의 요구도 포함했다. 임금 인상, 휴일·휴가·성과급·격려금 원하청 동일 적용, 노조 활동 보장 등이다. 이 요구안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함께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다.

이 요구들은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것들이다. 지난 수년간의 구조조정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이 크게 삭감됐다. 그래서 불만이 매우 크다.

“저는 대우조선에서 하청으로 일한 지 6년째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계속 삭감돼서 처음 일할 때보다 적습니다. 지난해에는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야간 수당을 삭감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최고임금이 정해져 있어서 신입과 고참의 임금이 같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매우 중요한 담당을 하고 있음에도 성과급과 격려금 등에서 차별을 당했다.

이처럼 낮은 임금과 차별 대우에 맞서 투쟁하려고 해도 사측은 고용 불안을 이용해 하청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일쑤였다. 그래서 노동조합 활동 보장 요구도 중요하다.

정규직 노조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를 함께 걸고 투쟁하는 것은 원하청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해 좋은 출발이다. 대우조선 민영화가 정규직뿐 아니라 하청 노동자들의 조건도 위협하기



고용형태를 뛰어넘는 연대 강화는 민영화 저지에도 중요하다

때문에 함께 단결하는 게 중요하다.

원하청 단결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면 기층에서 투쟁을 발전시키며,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가능성을 계속 보여 주고 있다.

지난해 대우조선 식당 노동자들(금속노조 웰리브지회)은 노조를 만들고 인상적인 파업을 벌여 성과를 냈다.

또, 최근에는 파워 그라인더 하청 노동자 수백 명이 2주간 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임금 인상을 쟁취했다. 이 여파

속에서 다른 부문의 하청 노동자들도 임금이 인상됐다. 노동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임금을 올려 달랜 것이 다.

고용 불안에 맞서는 움직임도 있다. 얼마 전 해고된 대우조선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하청노조에 가입하고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규직 활동가들이 이런 투쟁에 연대하고 하청 노동자들과의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

김지태

▶ 4면에서 이어짐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가장 많이 변한다

자신의 힘을 깨달으면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고유한 견해를 확신하게 되고, 지배적 관념에 도전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에 마음을 연다.

가령 노동자의 연대라는 생각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진부한 상식이였다. 그러나 2010년대에는 마치 공상처럼 처부됐다. 다행히 2016년 박근혜 퇴진 운동 전반부에 노동계급이 주도적 구실을 한 덕분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배신에 직면해서도 노동자들은 자기

저하되지 않고 다시 저항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자 노동자의 연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노동운동가들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의 의식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바로 혁명기에 일어나는 급진화이다. 유대인들을 혐오하던 대다수 러시아 노동자들은 1905년 혁명이 무르익자 수도 페테르부르크 노동자 평의회 의장으로 유대인인 트로츠키를 선출했다. 1917년에는 아예 처음부터 유대인 혐오의 악발이 먹히지

않았다.

여성을 구타하며 천대하던 자들도 여성들이 운동에 앞장서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1917년 2월 혁명은 아예 여성들이 이끌었다.

정교회 외에는 모조리 이단 취급하며 박해하던 종교 사상도 혁명기에는 그 힘을 잃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노동자 혁명이 없었지만 장차 일어나게 되면, 노동자들의 의식은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크게 바뀔 것이다.

맺음말

투쟁 속에서 정치적 견해를 내놓는 조직된 혁명가들도 노동자 의식 변화의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해야 한다. 이는 혁명적 좌파가 극소수이고 그중 다수가 종파적인 우리 나라에서 특히 중요하다므로 더욱 힘주어 말하고자 한다.

제1차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의식 변화 과정에서도 전쟁을 처음부터 반대한 극소수 혁명적 좌파가 중요한 구실을 했다. 특히, 러시아에서 레닌과 볼

셰비키가 그랬다.

그런 정치 세력이 매우 잘 조직돼 있어야 이런 효과가 크다.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는 전 세계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위기는 경제적 자유와 자유시장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정서는 서민층에서 광범한데,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조직 노동자 운동의 힘이 강력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

는 탓에 우익(심지어 파시즘) 정당들이 어부지리를 얻고 있다. 우리 나라는 조금 다르지만, 잘못하면 장차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의식이 변하기를 바란다면 혁명적 좌파는 노동자 투쟁의 규모를 키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 운동이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정치적 운동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 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대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처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용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용되면 우리와 함께할 시대.

침몰부터 촛불 이후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 5년을 돌아본다



김승주

오는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다. 304명의 생때같은 목숨들이 속절없이 가라앉던 그날의 고통과 충격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해를 더해도 잊히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현 사회 전체를 너무나 비극적인 방식으로 비춘 거울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단지 배 한 척만이 아니라 **체제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진 우선순위로 돌아가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침몰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느라 외면하고 방치해 온 여러 요인들이 2014년 4월 16일 그날따라 겹치고 겹쳤고, 결국 대형 참사를 낳았다.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는 갑자기 오른쪽으로 크게 돌았다. 조타실에서 조작한 것 이상의 회전이었다.

정부 고시 기준에 따르면 정상적인 배는 아무리 심하게 급선회를 해도 10도 이상 기울면 안 된다. 그러나 여객실을 늘리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개조돼 왼쪽이 더 무거웠던 세월호는 급세 20도까지 기울었다.

18도 정도 기울었을 때 대충 묶여 있던 화물들이 한쪽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세월호에는 기준치를 훨씬 넘긴 양의 화물들이 실려 있었다. 그렇게 실

으려면 규정을 어기고 대충 고박(고정)할 수밖에 없었다.

배가 기울수록 물은 점점 더 많이 들어왔고, 물이 들어올수록 배는 더 빨리 기울었다. 닫혀 있어야 할 문들이 대부분 열려 있었다. 고장 나거나 낡은 게 많아서 열어두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예고된 참사'였다. 세월호는 자주 왼쪽으로 기울었다. 참사 몇 달 전에도 세월호는 바람이나 파도 때문에 휘청거리다가 다시 육지로 되돌아오곤 했다.

세월호와 쌍둥이배였던 오하마나호의 선장은 "죽어도 더는 못 신는다"고 버텼다. 합해서 113톤 정도 무게인 중장비 두 대를 부두에 버리고 출항했다. 이 화물들은 2014년 4월 15일 세월호에 실렸다.

이것이 철근 묶음과 더불어 배가 기울자마자 쏟아졌고, 화물의 이동은 걷잡을 수 없는 전복으로 이어졌다.

제주 해군기지

세월호 참사 1기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당일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수백 톤이 과적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기지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전략을 돕기 위해 지어졌다.

인천·제주 간 항로를 독점해 온 청해진해운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물동량 증가를 예상하고 있었다. 청해진해운은 이 항로 운항에서 다른 선박회사가 진입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월호 도입을 서둘렀다.

선체조사위 종합보고서는 4월 15일 세월호에 실린 제주 해군기지행 철근의 양은 세월호 운항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덕분에 이날 따라 화물 운임 수입이 1000만 원이나 늘었다.

왜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세월호는 출항했을까? 참사 후 던져진 큰 의문 중 하나였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는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었다. 이런 압박으로 다른 배들과 달리 세월호는 악천후 속에서도 출항을 강행했을 개연성이 높다.

국정원이 세월호를 실소유주처럼 관리하고, 침몰 직후 청해진해운 물류팀 직원과 수 차례 통화했던 것도 제주 해군기지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는 탄생부터 참사까지 위험천만한 친체국주의 정책과 얽혀 있었던 것이다.

안전보다 뇌물

자본주의에서는 투자 대비 최대한의 이윤을 뽑아 내는 것이 지상 과제이다. 이 시스템에서 확률상 일 년에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한 사고 때문에 미리부터 안전 인력과 장비와 훈련에 투자하는 것이 낭비이자 비효율로 다뤄지는 이유이다.

국가도 청해진해운도 이 점에서 다르지 않게 행동했다. 청해진해운이 2013년 한 해 동안 직원 안전 교육에

쓴 돈은 겨우 54만 원이었다.

반대로, 온갖 불법들을 눈감아 주고 인천~제주 항로 독점권을 지켜 줄 국가 기관 책임자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것은 낭비가 아니었다.

청해진해운은 매년 받는 선박 중간검사나 정기검사 때 뇌물을 200만~300만 원씩 사용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과장 박성규는 3500만 원과 양주 3병에 세월호 도입을 허가해 줬다.

역대 정부들은 '안전 투자보다 규제 완화' 정책으로 참사로 가는 길을 놓았다.



정신병원에서 촬영한 사진

침몰하는 세월호 희생 학생들은 구명조끼를 서로 양보하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구조하려 배에 다시 뛰어들었다

국가, 준비된 무능

사고가 사건이 되고 참사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국 국가의 무능이 드러났다. 안전 규제부터 구조까지 지속적으로 국가역량을 감소시켜 온 탓이었다.

선박 안전 관련 규제는 2009년부터 눈에 띄게 풀렸다. 2012년에는 수난구호법이 개정됐는데 "해양 사고가 연간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조·구난의 많은 부분을 민간에 맡겼다.

박근혜 정부는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해 첫해에만 600개 넘는 규제를 없앴다. 예산 부족 때문에 인명 구조, 수난 구호 명령, 선박 좌초·전복 대처를

촛불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질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참사를 낳은 여러 친기업·이윤 우선 정책들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세월호를 지워 버리려고 했다. 박근혜 정부는 참사의 진상 규명을 회피하고 선체 인양을 차일피일 미뤘다. 해경에 대한 압수수색을 가로막았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

담당하던 지방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계가 없어졌다.

이것은 참사 당일 경악스러운 수준의 구조 무능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7000톤짜리 배가 침몰했는데 출동한 배는 100톤짜리 목포해경 경비정 123정 한 척이었다. 10명의 대원들은 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구명보던져 주는 훈련만 해 왔다. 그마저도 2014년 2월 정기 인사로 직원이 바뀐 뒤에는 훈련이 없었다. 김경일 정장이 그 일부였다.

청와대는 '영상 보내라', '구조자 수 보내라' 집요하게 보고를 독촉했지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충격받은 여론을 수습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

들었다.

끈질기게 항의하는 유가족들의 도덕성을 훼손하려고 유가족을 '돈벌레', '세금 도둑' 취급하며 모욕했다.

이는 보통 사람들에 대한 박근혜 일당의 멸시를 상징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공분이 더욱 컸던 것이다.

결국 이 악행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세월호 참사와 은폐에 대한 분노는 퇴진 운동의 중요한 동력이었다.

여전한 과제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드디어 배가 물으로 올라 왔다. 그 덕분에 진상 규명이 한 걸음 진전했고, 일부 미수습자의 유해가 발견됐다. "세월호 7시간"의 윤곽이 드러났고, 박근혜가 쫓겨나 구속됐다.

그러나 유의미한 변화는 안타깝게도 거기서 멈췄다. (관련기사 281호 '세월호 참사 5년 — 문재인 3년 동안 수사·처벌은 제자리걸음')

문재인은 유가족을 대했지만 전 정부와는 다르게 세월호 약속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여당이 주도해 만든 사회적참사 특

조위(2기 특조위)는 권한 면에서 1기 특조위와 별로 다를 게 없게 됐다. 책임자 처벌도 더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검찰 내 특별 수사단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이 결단해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오히려 해경 내 참사 책임자들 중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고위직으로 복귀한 자들도 있다. 침몰을 보고받기도 무대응이었던 해경 경비안전국장 이준재, 침몰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던 해경 경비과장 여인태는 모두 승진했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이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수사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이 자유한국당 대표가 돼 설쳐 대고 있다.

반복되는 참사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로 7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 안전 사고들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고령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 의료 산업 등의 규제 완화, 노동계약 등 박근혜의 못다 이룬 정책들을 이어받고 있다. 고(故) 김용균 씨 사망으로 노동 안전 문제도 부각됐지만, 정부는 미봉책으로 생생만 내려했지 실질적 개선은 외면했다.

반복되는 참사는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우파 정권의 책임이, 더 큰 문제의 일부임을 보여 준다. 대형 참사는 근본적으로 생명보다 돈을 우선하는 자본주의 체제, 특히 국가의 비용 절감 논리와 기업 봐주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런 질서를 수호하는 친자본주의 정부인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함께 분노하고 반(反)박근혜 항의에 동참했던 이들이 문재인 정부에도 항의하고 자본주의에도 분노해야 하는 이유다.

궁극으로 '돈보다 생명'인 사회를 만들려면, 그 열망들은 장차 반자본주의적 대중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추천 책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와 국가를 묻다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김승주 지음 | 책갈피 | 196쪽 | 9,000원



미국 의회, 트럼프에게 베네수엘라 개입 촉구하다

김준호

베네수엘라 우파 야당들의 반정부 운동이 10주를 넘긴 4월 6일, 베네수엘라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들이 맞붙어 세를 겨뤘다.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후안 과이도 지지 시위와 외세 개입 반대 시위에 각각 수만에서 수십만 명이 참가했다. 과이도의 반정부 운동(“자유 작전”)은 곳곳에서 ‘맞붙’ 시위에 부딪혔다.

이 시위 하루 전날인 4월 5일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압박을 확대·강화했다.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베네수엘라 석유 관련 제재를 확대해 “정권의 명줄”을 틀어쥐겠다고 으름장 놔다. 그 발원 직후 미국 재무부는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기업 PDVSA 석유를 운송하는 선박 34척을 제재했는데, 베네수엘라 석유를 쿠바로 운송한 그리스 선박회사 두 곳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은 “미국의 영향력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4월 11일부터 칠레·파라과이·페루·콜롬비아를 순방하며 베네수엘라 압박 동참을 조직하고, 4월 15일 콜롬비아에서 열릴 리마그룹 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는 냉전 종식 이후 가장 공세적으로 라틴아메리카에 개입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은 4월 8일 메이저 리그와 쿠바야구연맹 사이의 협약을



“제국주의는 베네수엘라에 간섭 말라!” 4월 6일 수도 카라카스를 메운 ‘반제국주의 시위’. 참가자들은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압박을 규탄했다

무효화해 마두로 정부를 돕는 쿠바를 압박했다. 쿠바가 “진정한 제국주의”라면서 말이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미국의 압박은 경제 제재에 그치지 않는다. 지금 미국 상원 표결을 앞둔 베네수엘라 제재 관련 법안들 중에는 베네수엘라 ‘지원’ 목적의 국제 경제 기구 수립, 과이도 지지자들에 대한 선별적 제재 해제뿐 아니라 러시아 개입 저지를 위해 국무부와 중앙정보국(CIA)의 베네수엘라 개입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뉴욕 타임스〉는 4월 3일자 사설에서 명료하게 주문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 대해] 더 공세적으로 나서

야 한다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쿠데타든 내전이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두로 정부를 축출해,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실히 제고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 지배 계급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 간섭의 피해는 이미 94퍼센트가 빈곤 상태로 추산되는 베네수엘라인들이 가장 크게 보고 있거니와, 미국 제국주의의 뜻이 관철되면 “난민이 약 800만 명 [추가] 발생할 것”이다.(미국 외교전문잡지 《포린 어페어스》).

‘미니 트럼프’라 불리는 브라질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뱀의 혀처럼 굴고 있다. 보우소나루는 3월에 방미해 “베네수엘라 사태 해결을 위한 미국

의 군사적 역량을 신뢰한다”고 했고, 4월 8일 “베네수엘라를 제2의 쿠바, 제2의 북한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했다. 이미 보우소나루 정부는 장성급을 미국 남부사령부(미군의 라틴아메리카 개입 총괄)와의 연락 담당자로 뒤 미국과의 군사적 연계를 강화한 바 있다.

문재인인의 친제국주의

문재인 정부가 이에 동참해 300만 달러를 쓰겠다고 나선 것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는 베네수엘라 난민 지원을 명분으로 들었지만, 정작 한국에 온 난민들은 푸대접하는 문재인이 진정 지원하려는 것은 미국 제국

주의다.(본지 웹사이트에서 관련 기사 ‘문재인 정부, 베네수엘라 진보 정권 전복 돕겠다고 300만 달러 쓴다’를 보시오.)

외세는 베네수엘라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간섭은 베네수엘라인들의 생존을 위협할 뿐이다. 서방의 ‘인도적’ 지원은 베네수엘라 우파 야당의 정권 전복 시도를 도울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간섭은 베네수엘라 노동자 대중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는 투쟁에 나서기 어렵게 한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모든 제재·압박을 철회하라.

※ 기사 전문을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신간 《베네수엘라 위기 왜 발생했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책갈피)

‘21세기 사회주의’부터 제국주의 간섭까지

한때 ‘21세기 사회주의’를 주창한 베네수엘라가 우고 차베스 집권 후 20년 만에 최대 위기에 빠졌다. 미국의 제국주의 간섭에 분개하는 많은 사람들 사

이에도 여러 의문들이 생기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철 지난 사회주의” 정책을 폈기 때문일까? 야당의 반정부 운동은 독재에 맞선 민주주의 운동일까? 왜 강대국들이 앞다퉈 베네수엘라에 개입하려 할까? 전 세계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에 희망을 줬던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좌파 정부들이 왜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까? 21세기 사회주의는 불가능할까? 진정한 대안은 무엇일까?

전 세계 우파는 베네수엘라 사례를 ‘사회주의의 실패’라고 보고, 친서민 정책을 펴면 비극적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우고 차베스와 그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좌파도 일부 있다.

그런 지금 상황에서, 베네수엘라가

맞은 위기와 대안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책을 준비했다. 이 책은 20세기 라틴아메리카를 휩쓴 항쟁부터 지금의 반정부 운동과 트럼프의 압박까지 모두 다룬다. 이 책은 오늘날 베네수엘라 위기의 원인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의 부재(혹은 부족)라 주장한다. 또 베네수엘라 위기를 보며 사람들이 갖는 여러 질문에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답하려 시도한다.

이 책에는 2006년에 번역 출간됐던 조셉 추나라의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21세기의 혁명》(책갈피)을, 독자들을 감안해 한글 문장을 교정해 재수록했다. 추나라는 20세기 베네수엘라 역사부터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 선언까지를 현지 활동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살리면서 탁월하게 분석한다.

또, 차베스 사망 후 베네수엘라가 치명적 위기로 빠지는 과정을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분석한 논문 ‘차베스 이후 베네수엘라는 어디로?’를 번역해 소개했다. 이 글을 쓴 앤디 브라운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수동혁명 개념부터 오늘날 세계 좌파들 사이의 논쟁까지 다룬다. 풍성하면서도 분명한 마르크스주의 분석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두 글 앞에 필자가 2019년 3월 노동자연대 공개토론회에서 발제한 내용을 간단히 다듬어 실어, 독자들이 최근 상황을 이해하며 책을 읽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하려 했다.

오늘날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이해하고 교훈과 과제를 얻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김준호 역은이



베네수엘라 위기 왜 발생했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조셉 추나라·앤디 브라운·김준호 지음, 책갈피, 136쪽, 6,000원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대통령 퇴진 이후 알제리 항쟁은 어디로?
- ★ 남아공: 혁명을 주장하는 새 정당이 탄생하다
- ★ 기류가 바뀌고 있는 듯한 한반도 상황
- ★ 고려대: 강의 수 확대, 시간강사 해고 반대 집회가 열리다
- ★ 박원순은 공무원에게 제로페이 영업 압박 중단 약속 지켜라



마르크스주의자 역사가 도니 글렉스틴 에든버러대학 교수 초청 강연

파시즘, 어제와 오늘

— 역사 속 나치와 오늘의 재등장

이 글은 4월 5일 <노동자 연대> 주최 초청 강연의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도니 글렉스틴**(아래 사진)은 영국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당원이고 에든버러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그는 《영국 노동당의 역사》, 《마르크스주의와 노동조합 투쟁》(모두 책갈피)의 공저자이자, 《Nazis, Capitalism and the Working class》(1999)와 《A People's history of the Second World War》(2012, 국역 근간) 등을 썼다. [] 안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편집부가 덧붙인 것이다.

폴란드에 있던 죽음의 공장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가스실을 보면 파시즘이 어떤 짓을 저지룰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수십만 명이 기차에 실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옷까지 벗겨진 채 소각로에 처넣어졌습니다. 그나마 운이 좋아 불에 타 죽지 않았던 극소수는 죽을 때까지 노예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포함해 1000만 명이 홀로코스트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더 거대한 제국주의 갈등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제2차세계대전 기간에] 5000만 명에서 7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민중도 전 세계 민중과 함께 전쟁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사람들은 파시즘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

라고 믿었습니다. '다시는 안 된다'라는 슬로건이 바로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극우 정당과 노골적인 파시스트 정당이 득세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오스트리아 자유당(FPO)이 있습니다. 물론 이 당은 자유를 추구하는 당이 아닙니다. 오스트리아 자유당은 감옥에 갇혔던 나치 친위대(SS) 장교들이 설립한 정당입니다. 이런 당이 지금은 오스트리아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독일에는 독일을위한대안당(AfD)이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파시스트가 굉장히 많이 속해 있는 이당이 독일 연방의회에서 93석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몇 주 전(3월 20일) 네덜란드 지방선거에서 극우 정당[네덜란드자유당]이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파시즘의 영향이 유럽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파시즘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여러 곳에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 자신은 파시스트는 아니지만 파시즘의 성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말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市) 총기 난사 사건도 파시즘의 영향력을 보여 주는 사

례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뉴질랜드 총기 난사 사건 후 1주일 동안 제가는 영국에서 무슬림에 대한 공격이 60퍼센트 늘었습니다.

파시즘을 이해해야 파시즘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파시즘이 처음 등장할 때 어떤 사람들은 파시즘이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만들어 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죽은 지 오래지만 파시즘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개인에 의존하는 운동이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교육이 부족해서, [대중의] 역사적 지식이 부족해서 파시즘이 부상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시즘을 [역사적으로] 경험해 봐서 파시즘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파시즘이 다시 대두하고 있습니다.

뿌리 — 과거의 경험

파시즘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앞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파시스트'라는 말을 우파나 반동적인 사람들에게 대한 욕설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1930~1940년대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과 한반도에서 잔혹한 군부 통치를 시행했지만 그것은 파시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파시즘의 뿌리는 무엇일

까요?

모든 계급 사회는 불평등, 빈곤, 불의를 만들어 냅니다. 극소수가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 대다수를 착취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배자들은] 때로 무력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배자들은 사기를 칩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기가 더는 먹히지 않을 때,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속임수가 통하지 않을 때 대중적 파시즘 운동이 등장하게 됩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대중의 동의를 얻어 내기 때문입니다. 대중이 자본주의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투표권, 표현의 자유,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하지만, 자본가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착취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위기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위기의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대중적 동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파시즘은 [바로 그럴 때] 지배계급이 통제력을 재확립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고전적 파시즘의 전형적 사례인 독일의 역사적 경험을 돌아보겠습니다.

제1차세계대전은 독일 혁명으로 종식됐습니다. 당시 독일 지배계급은 독일사회민주당(SPD, 이하 사민당)과 타협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신 의회의 통제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런 일시적 타협을 모든 지배계급이 기꺼이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컨대, 제1차세계대전 당시 독일 육군 대장이었던 에리히 루덴도르프는 히틀러와 손잡고 1923년에 '맥주홀 폭동'이라는 무장 반(反)혁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폭동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히틀러는 권력을 장악하려면 대중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선거로 눈을 돌렸습니다. 선거 제도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선거에서 얻었던 지지는 보장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치는 무엇을 믿었던 것일까요? 이들의 사상은 지배계급의 사상과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치 사상은 보통의 지배계급 사상인 민족주의, 유대인 적대, 인종차별을 과장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나치는 자본가들의 사상을 일말의 타협도 없이 [일관되게] 구현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완전 철폐, 전체주의적 [계급] 독재로 말이죠.

1920년대 호황기에 이런 사상은 청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나치당의 주요 지도자들이었던 히틀러·괴링·괴벨스는 지배계급 출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중간계급 출신이었습니다.

지배계급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위기 시기에 자신들을 지킬 대중 운동



사진: 도니 글렉스틴



연립정부에 참여 중인 오스트리아 자유당(FPÖ) 좌파들은 이런 노골적인 나치 정당이 득세하는 상황에 심각하게 대응해야 한다

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파시즘은 위기 시기에 [지배계급에게] 대중과의 연결 고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파시즘은 기성 체제에 반대하는 척하지만, [대중의] 분노를 기성 체제를 [위기에서] 구출하는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중요했던 것은 선거가 아니라 거리 운동이었습니다. 1932년에 히틀러는 청년 20만 명 규모의 '거리의 군대', 즉 나치 돌격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히틀러가 지배계급에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반혁명을 수행할 물리적 힘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파시즘은 보통의 정치와는 구분됩니다. 파시즘이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가 아니라, '거리의 군대'를 동원해 노동계급을 물리적으로 분쇄하고 반혁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파시즘의 성장 과정을 살펴해보겠습니다. 1928년에 독일 나치당의 득표율은 2.6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932년 7월에 나치당은 37.4퍼센트를 득표하면서 제1당이 됐습니다. 1928년에서 1932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 바로 1929년 세계 대공황이었습니다.

나치당에 대한 지지표는 주로 중간계급에서 나왔습니다. 중간계급은 현재 체제에 분노했고 지배계급에 분노했습니다. 중간계급은 나치당에 투표하는 것이 지배계급에 대한 항의의사를

표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치는 대중의 분노를 자본주의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려버렸습니다. 나치는 유대인 금융업자들을 비난하고, 사민당을 비난하고, 공산당을 비난했습니다. 지배계급만 빼고 모두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노동계급은 이런 선동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노동계급은 대부분 여전히 사민당과 공산당에 투표했습니다. 그러나 중간계급에게는 이런 선동이 통했습니다.

그런데, 무솔리니든 히틀러든 선거에서 선출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지배계급에 의해] 임명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솔리니는 1922년에 이탈리아 국왕에 의해 두체[총리]로 임명됐습니다. 히틀러 역시 1932년 12월에 총리로 임명됐습니다. 저는 당시 독일 총리와 군부의 수장이 히틀러를 총리로 지명하면서 나섰던 대화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총리가 될 만한 사람은 히틀러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히틀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총리가 되면, 그것이 누구든 총파업을 심지어 내전을 촉발할 것이다. 그러면 군대를 동원해 좌파뿐 아니라 국가사회주의당[나치]에도 맞서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전혀 바라는 바가 아니다.”

그렇게 히틀러는 총리가 됐고,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히틀러는 이제 40만 명으로 불어난

나치 돌격대를 이용해 좌파를 분쇄하고 노조를 파괴하고 독재를 시작했습니다. 그 독재는 제2차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를 낳았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치가 가장 많이 득표할 때조차 유권자 3분의 1의 표밖에 얻지 못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틀러 집권 전 모든 선거 결과를 봐도, 노동계급 정당들이 받았던 지지를 모두 합하면 나치 지지보다 강력했습니다. 또, 노동계급에게는 나치에 맞설 노동조합 같은 강력한 조직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노동계급이 분열해 있었는데는 것입니다. 사민당과 공산당은 서로 반목하느라 나치의 위협을 간과했습니다. 결국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지금은 무엇이 다른가

그러면 오늘날 상황을 살펴 봅시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파시즘이 선거에서 성장하는 동학은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의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당시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기성 정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항의성 투표를 합니다. 곳곳에서 극우 정당들이 득세하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과거 파시즘이 형성될 [1920년대] 당시는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고, 러시아와 독일에서 발발한 혁명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

오늘날 파시즘은
고전적 파시즘보다
인종차별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합니다.
파시즘은 오늘날 지배계급이
위기 와중에 인종차별을
이용해 분열 지배하는 것에서
득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다. [당시 독일에는] 퇴역 군인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들은 대부분 매우 반동적이었습니다. 즉, 초기부터 반혁명 [의 가능성]이 매우 뚜렷하고 실질적이었습니다. 당시 나치 당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입었던] 갈색 셔츠, 검은 셔츠는 군복이었습니다. 사실 인종차별은 [파시즘에서] 부차적인 요소였습니다. 예컨대 이탈리아 파시즘은 유대인을 적대하지 않았습니다. 무솔리니의 당 안에 유대인 파시스트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지배계급은 파시즘과 손잡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무솔리니의 파시즘 정당은 1915년에 창당했는데, 불과 7년 후인 1922년에 무솔리니가 두체[총리]로 임명됐습니다. 히틀러의 나치당은 1920년에 창당했지만 1928년까지만 해도 히틀러는 전혀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 후에 총리로 임명됐습니다.

오늘날의 파시즘은 [당시와] 다릅니다. 오늘날 파시스트들은 반혁명 세력을 대놓고 자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파시즘은 [고전적 파시즘보다] 인종차별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합니다. 파시즘은 오늘날 지배계급이 위기 와중에 인종차별을 이용해 분열 지배하는 것에서 득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파시즘의 성장 과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부터, 특히 2003년에 중동에서 제국주의 전쟁[이라크 전쟁]이 발발했는데, 그 결과 난민들이 [전쟁을 피해] 유럽으로 많이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에 더해 유럽에서 테러가 여러 차례 벌어졌죠. 이런 상황을 이용해 지배계급과 언론은 끔찍한 인종차별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대중은 분노해서 현 상황에 항의하고자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있었던 항의성 표심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드러났습니다. 우파 정당, 우익 포퓰리즘 정당, 파시스트가 포함된 우파 정당, 노골적인 파시스트 정당이 등장했습니다. 1930년대보다 오늘날 상황이 더 복잡한 것입니다.

1920~1930년대에 존재했던 강력한 공산당·사민당이 오늘날에는 대부분 사라졌다는 것도 중요한 차이입니다. 공산당들은 사라졌고, 사민당들은 집권 후 대중을 실망시켜 이전보다 세가 약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항의 표심이 꼭 오른쪽으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왼쪽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시리자가 한 사례입니다. 영국에서는 사회주의자 제러미 코빈이 노동당 대표가 됐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가 지지를 많이 받

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의 실패 때문에 이전과 달리 [오늘날에는] 중간계급뿐 아니라 노동계급에서도 극우 정당, 심지어 파시즘 정당 지지표가 많이 나옵니다.

실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차이도 있습니다.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는 당시보다 오늘날 훨씬 강력합니다. 즉, 1930년대 같은 반혁명이 지금 당장 일어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투표는 굉장히 수동적인 행위입니다. 파시스트들에게 훨씬 중요한 것은 '거리의 정당'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거리의 군대'가 형성될 위험은 실질적인 것이지만, [오늘날] 파시스트들은 그런 군대를 모으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리의 군대' 없이는 파시즘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 즉 물리적 반혁명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혁명가·사회주의자·반(反)파시즘 운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1930년대에는 파시즘이 [집권하면] 끔찍한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를 불러올 것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파시즘이 [집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파시즘을 위험한 것이라고 보게 설득할 수 있습니다.

파시스트가 아니고 극단적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아닌 다수 대중을 조직하는 것이 반파시즘 운동을 성공적으로 건설하는 핵심 비법입니다.

어떻게 맞설 것인가 — 공동전선

공동전선을 구축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전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공동전선은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개혁주의자들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공동전선을 건설한다고 해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개혁주의자들과 모든 점에서 의견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혁명적 사회주의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은] 의견이 다릅니다. 하지만 단일 쟁점에 대해서는 힘을 합치자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영국에는 '인종차별에 맞서자'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인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사실상 이 단체를 만들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제러미 코빈이 이 단체의 의장을 역임했고, 현 의장 다이앤 애벗은 노동당 예비내각의 [보건부]장관입니다. 즉, 개혁주의 지도자들과 혁명가들이 한데 모인 것입니다. 이 덕분에 기층에서도 노동계급이 단결을 구축해 인종차별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성공하는 전술입니다. 우리[사회주의노동자당]는 성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성공해 봤습니다.

1970~1980년대에 [영국 반파시즘 운동은] '반나치동맹'(ANL)이라는 단체를 꾸려 당시 파시스트 조직 국민전선을 무너뜨렸습니다. 10년 후에는 [극우 정당] 영국국민당(BNP)을 박살냈습니다. 당시 영국국민당은 영국수호동맹(EDL)이라는 '거리의 군대'를

▶ 10면으로 이어짐

▶ 9면에서 이어짐

건 설하려던 자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선거를 통해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대규모 거리 시위를 벌여 파시스트에 정면으로 맞서 그들이 ‘거리의 군대’를 조직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공동전선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제가 사는 [스코틀랜드 수도] 에든버러의 예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직한] 거리 시위와 행진에서는 노동당 사람도 연설합니다. 3주 전[3월 16일] 글래스고에서 큰 집회가 있었는데 [스코틀랜드 정부 여당인]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소속 의원이 연단에서 발언했습니다.

제가 속한 교원노조를 비롯한 노동조합들이 ‘인종차별에 맞서자’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집회가 열릴 때면 발언자를 파견하고, 꾸준히 재정 후원을 하고, 협력적으로 운동을 건설합니다.

종교단체도 [운동에] 동참합니다. 무슬림·기독교·유대교 단체들이 집회에 참가하고, 집회에서 연설하고, 집회를 지지합니다.

에든버러의 성당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시리아에서 에든버러로 온 난민 한 명이 인종차별적 우파에게 칼로 찢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각 행동을 조직해, 사건 발생 후 24시간 만에 수백 명이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의원들, 난민들, 피해자 가족들이 이날 시위에서 발언했습니다. 이 시위 덕분에, 같은 날 저녁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이 의회에서 [이 범죄를 규탄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의 전 수석 전략관 스티브 배넌이 에든버러를 방문했

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도 24시간 만에 항의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언론이 우리 시위를 대서특필해 배넌이 환영받지 못했음을 널리 알렸습니다.

지난 토요일[3월 31일] 파시스트들이 에든버러에서 거리 시위를 벌이려 했습니다. 우리는 파시스트 시위보다 열 배나 큰 대항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10대 1에] 적절한 비율인 것 같습니다.

파시스트들이 대중의 대변자인 척할 때마다, 그들이 대중의 대변자가 아님을 보여 준 것입니다. 대중 행동으로 파시즘과 인종차별에 맞서면 저들의 사기를 꺾고 저들을 약화시킵니다. 그럼으로써 대중이 실제로 느끼는 분노를 파시스트들이 엉뚱한 데로 돌리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도 있습니다. 첫째, 공동전선 전술이 [파시즘이 성장하는] 모든 곳에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럽에는 영국의 사회주의노동자당처럼 하는 좌파가 없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설령 공동전선이 성공을 거둔다 해도, 그 성공이 영원히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자본주의[에 내재된] 위기 때마다 파시즘과 인종차별이 계속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또 있습니다. 파시즘을 끝장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명적 당을 건설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파시즘이 [대중의] 분노를 엉뚱한 데로 돌리지 못하게 해야 하지만, 위기를 만들어 내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끝장내야 합니다.



대중 행동으로 맞서야 한다 반파시즘 운동의 핵심 비법은 혁명가와 개혁주의자들이 단결해서 거리에서 파시스트들을 내쫓는 것이다. 2만 5000명이 참가한 올해 인종차별 철폐의 날 런던 시위

정리 발언

‘파시즘’과 ‘나치즘’ 두 용어의 차이에 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청중 토론에서 답변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나치가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배했을 당시, 독일에서 나치에 맞선 거대한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운동은 스스로를 ‘안티파시[반(反)파시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두 표현을 구분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반(反)파시즘과 반(反)나치는 같은 표현입니다.

인종차별[적 우익]이 어떻게 파시즘으로 비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독일 나치와 이탈리아 파시스트 모두 평범한 사람들을 경멸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파시스트들은 자신들의 반혁명 계획을 성공시키는 데에 필요한 대중적 지지를 얻고자 무엇이든 내어 줄 태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나치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나치당이 집권 전 2년 동안 발행했던 신문을 [모두] 읽는 교역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에서 유대인 관련 기사는 겨우 5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정부 정책 비판, 실업 문제, 공산당 비판 기사들이었습니다. 대중의 분노를 사는 쟁점이라면 무엇이든 다룬 것입니다.

나치에게 중요한 것은 특정 단어를 이용하는가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대중의 분노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마지막 발언자가 해 주신 질문, 제2차세계대전 관련 질문에 먼저 답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제2차세계대전에 관해 쓴 책은 한국에 아직 출판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핵심만 말하면 제2차세계대전은 지구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제국주의자들이 서로 벌인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완전히 별개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파시즘에 맞서 민중 항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영국 총리였던] 처칠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파시스트였을 것이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처칠은 파시스트의 지지를 받던 스페인의 프란치스코 프랑코를 비호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코는 1975년에 죽을 때까지 권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반면 레지스탕스 운동은 프랑스·이탈리아·그리스 등 곳곳에서 파시즘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진정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다. 이들은 제국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과 미래를 위해 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동전선에 관한 논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공동전선을 건설할 때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공동전선을 맺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제 답은 ‘계급’입니다.

따로, 또 같이

영국의 현 상황을 봅시다. 안타깝게도 영국 노동계급은 브렉시트에 대한 태도를 두고 분열해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급 사람들과 여러 노동조합들, 좌파 정당들은 공동전선 ‘인종차별에 맞서자’에서는 함께 행동하기로 합의했지만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제가 사는 스코틀랜드에서 노동당은 스코틀랜드 독립에 반대하지만 스코틀랜드국민당은 독립에 찬성합니다. 이 둘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일한 경우는 ‘인종차별에 맞서자’ 행동에서입니다.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으로서 저는 노동당과 스코틀랜드국민당 모두와 이견이 있지만, ‘인종차별에 맞서자’에서 정한 요구들에는 이들과 저 모두 동의합니다.

공동전선은 매우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것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공동전선 안에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관

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전선 안에 있다고 해서 다른 모든 점을 두고 가진 이견을 감춰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동전선을 하면서도 [소셜리스트 위기] 신문을 팔고 당원 가입 호소도 합니다. 공동전선으로 힘을 합쳐 운동을 건설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영국에서 저희는 노동당원들과 공동전선 활동을 함께하면서, 노동당이 지방의회를 주도하는 곳에서 복지과 재정을 삭감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법률로 혐오 발언을 규제해 파시즘을 저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념해야 할 사실은, 그런 법률이 제정되면 우파보다 좌파가 훨씬 더 자주 그 법에 의해 공격받는다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벌이는 좌파가 인종차별 극우보다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서 ‘누구와 한 편에 설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혁명가들은 소수인데 파시즘의 거대한 위협에 어떻게 맞설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역사적 경험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1930년대에 인민전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독일의 위협으로부터 소련을 방어하기 위해 인민전선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인민전선 전략은 스페인에서 끔직

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스페인에서 혁명이 발발했는데, 스페인의 혁명적 좌파는 독일에 맞서 영국·프랑스·러시아 간 동맹에 누가 되지 않으려다가 혁명의 패배를 대가로 치러야 했습니다. 스페인 혁명이 패배하면서 전 세계 좌파가 약해졌습니다.

반대 사례가 러시아 혁명 당시에 있었던 공동전선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장성 코르닐로프는 파시스트 반란을 일으키려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레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임시정부 수반] 케렌스키의 어깨를 소총 거치대로 삼아서 코르닐로프를 향해 총을 쏘야 한다.”

[그 얼마 전] 케렌스키가 볼셰비키를 불법화하고 탄압했던 것 때문에 볼셰비키는 지하로 잠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레닌은 러시아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파시즘에 맞서 케렌스키와도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단결한 덕에 [러시아 노동계급은] 코르닐로프를 패퇴시킬 수 있었고 그로부터 두 달 뒤에 러시아 노동계급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주의자로서 할 일이 참 많은 것입니다. 파시즘의 위협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공동전선이라는 중요한 전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회주의자들의 본업인 자본주의 분쇄라는 과제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녹취 박소연 연은정 / 정리 김준효

화물연대 농협물류안성분회

노조 가입했다고 81명 계약해지라니!

새벽마다 농협물류 안성농식품 물류센터에서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의 하나로마트, 학교, 군부대 등에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실어나르는 화물 노동자들이 있다. 길게는 15년, 평균 7~8년간 이 일을 해온 노동자 140여 명 중 81명이 지난 3월 31일 무더기로 계약해지(해고) 통보를 받았다.

사측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동조건 개선에 나섰다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이 노동자들은 올 초 화물연대에 가입해, 계약 갱신을 앞둔 3월 말부터 사측과 교섭해 왔다.

그런데 사측은 계약 갱신일인 3월 31일을 하루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확약서 한 장을 내밀었다. 확약서에는 “운송관련단체 등에 가입하지 않을 것”, “어떠한 경우에도 운송 거부 및 단체행동도 하지 않을 것” 같은 문구가 명시돼 있었다.

조합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사측은 다음 날 문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사측은 화물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일 뿐”이라며, 화물연대에 가입해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이 잘못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잘못을 저질러 온 것은 십수년간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노동조건을 강요해 온 사측이다.

10년 동안 운송료는 단돈 10원도 오르지 않았다. 반면 노동강도는 갈수록 높아졌다. 차량에 농협 광고를



무더기 해고 즉각 철회하고, 노동조합 인정하라

도색하는 비용조차 노동자가 부담해야 했다. 광고 효과가 떨어진다며 연식이 오래된 차량에는 운송료도 적게 지급했다.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아 화물차 기사가 상하차 작업에 투입되기 일쑤였다.

탄압

배차반장이 불공정하게 배차를 하고, 돈을 빌려 갚지 않는 등 온갖 횡포를 부렸지만 노동자들이 회사에 진정을 넣어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런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는

것뿐이었다. 그러자 사측이 재계약을 무기로 노조를 탄압하기 시작한 것이다.

집단 해고에 항의하며 노동자들이 안성센터의 물류를 막으려 하자, 사측은 물량을 빼돌리고 안성농협물류센터를 폐쇄했다. 또, 조합원들에 대해 업무방해 금지와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을 통해 압박하면서, 화물연대 탈퇴가 전제되지 않으면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화물연대 탈퇴 강요, 계약 해지, 조합원 개인에 대한 법적 탄압”은 화물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설 때마

다 기업주들이 택하는 탄압 방식이다. 화물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이용해 투쟁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다. 농협물류안성분회 노동자들에게 벌어진 일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 보장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농협물류는 화물연대를 인정하고 무더기 계약해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 정부와 국회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

장우성

신영프레스전 여성 노동자 점거농성

사주는 배당금 860억 챙기고 정리하고, 정부는 수수방관

신영프레스전 노동자들이 정리하고에 맞서 1년 넘게 투쟁하고 있다. 금속노조 신영프레스전 분회는 조합원 45명 중 분회장 1명을 제외하고 모두 40~50대 여성 노동자들이다.

신영프레스전은 금천구 서울디지털단지에 위치한 중소기업이다.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고, 휴대폰 부품을 조립해 LG에 납품하는 1차 하청업체다.

지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매출 1500억 원, 당기 순이익 90억 원을 달성해 자본이 풍족한 회사였다. 한때 공장 7곳을 운영했고, 임시직을 포함해 직원 600명이 근무하기도 했다.

현재는 노동자 159명을 다 내쫓고 청산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노동자들은 “먹튀 청산”으로 규정하고, 사측에 “제대로 된 회사 운영”과 “복직”을 요구하며 3개월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현재 사측은 단전·단수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며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여성 노동자들은 점거 농성장을 지키며 회장 자택, LG 본사, 청와대, 금천구청 앞에서

집회를 해 왔다.

4월 9일 금천구청 앞 집회에서 신영프레스전 이순영 분회장을 만나, 생생한 얘기를 들었다.

“신창석 회장은 20년 전에 12억 원으로 회사를 차려서 엄청나게 재산을 불렸어요. 지난 20년 동안 주식 배당금만 약 860억 원을 챙겼죠. 그런데 노동자들은 야근을 밥 먹듯 했고, 집에서 자다가도 회사가 부르면 나가서 일했어요. 주 100시간을 일하기도 했죠.”

남녀 평등 우수 기업?

산재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임금은 호봉제가 아니라 시급제이다 보니, 10년 근무한 노동자나 신입사원이나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노동자들에 대한 인격 모독과 폭언도 심각했다.

신영프레스전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남녀 평등 우수 기업으로 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서 표창을 받았다. 신창석 회장은 노동자들의 고향을 짜내 벌어들인 돈으로 ‘기부’를 하면서 선량한 기업가로 이미지를 포장하기도 했다. 그 덕에 2016년에 국무총리였던 황교안이 상을 주

기도 했다.

“누적된 불만으로 노조를 만들게 됐지만, 직접적 계기는 여성 차별 문제였어요. 2017년에 장시간 노동에 넌더리가 난 직원들이 노동청에 신고하자, 시정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회사가 52시간제에 맞춰 2교대를 3교대로 변경했어요. 아 근데, 노동시간을 줄이니 평균 월급에서 약 80만 원이 팍 줄었어요.

“반발이 커지자 회사는 남성 직원들만 연봉제로 전환해 임금을 보장해 주고, 여성 노동자들은 삭감된 임금으로 먹고살라는 거예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위반 아닙니까? 여성 노동자도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많아요. 도저히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자, 적금 깨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2017년 12월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사측은 교섭 시늉만 하며 시간을 질질 끌었다. 그러다 2018년 7월 조합원 전원 포함 73명을 정리하고 했다.

신창석 회장은 혹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며 회사를 성장시킨 노동자들을 내팽개쳤다. 노동자들은 신

회장이 회사 이윤을 빼돌려 수년간 골프장 사업에 총 477억 원을 투자했다고 한다.

“LG 물량이 감소해도 회사를 운영할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금형·사출 기계로 다른 제품들을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우리 요구는 소박해요. 다시 평범하게 일하고 싶다는 겁니다.”

서울지방노동위가 부당해고를 판정하자, 사측은 2019년 1월 21일 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했지만, 공장 노동자들에게 청산 절차에 따라 해고를 통지했다. 복직 기대에 부풀어 있던 노동자들은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에 치를 떨었다고 한다.

노동존중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수수방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존중 약속했다면 ‘여성 노동자 고용 참사’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신영프레스전 분회는 신창석 회장과 원청업체 LG 그리고 정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점거농성 투쟁을 지속할 예정이다.

전주현

삼성화재 애니카

삼성답게 파업파괴자 모집하고 있다

삼성화재 애니카 사고조사원 노동자들이 4월 11일부터 이틀간 전면 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삼성화재 애니카지부 소속 노동자들은 찬성 90퍼센트로 파업을 결의했다.

이 노동자들은 자동차 사고가 나면 출동해서 사고를 조사하는 일을 한다. 삼성화재 애니카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을 타고, 삼성화재 애니카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지만, 삼성화재 소속이 아니라 삼성화재의 자회사인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주) 소속이다.

1년마다 계약을 맺는 비정규직인 데다가 정해진 기본급도 없다. 사고 처리 건당 수수료와 실적을 달성하면 나오는 인센티브가 전부다.

그런데 지난해 1월부터 사고조사원 노동자들에게 부여했던 업무우선배정권을 사측이 없애 버리면서 임금이 대폭 삭감됐다.

“처음에는 사고조사 업무를 우선으로 배정해 줬어요. 그러다가 직원들 실적을 평가하면서 등급을 매기기 시작했어요. 사고차량을 협력업체에 소개하고 렌터카 사용했는지 여부도 실적 평가에 들어가요. 처음에는 실적평가 3등급인 사람까지 업무 우선권을 주더니, 차차 2등급, 1등급까지로 제한했고, 지난해 1월에는 업무우선배정권을 아예 없애 버렸어요. 업무우선배정권을 없애면서 업무를 외부업체인 정비공장에 맡겨주기 시작했어요. 건당 수수료를 받는 우리는 수입(임금)이 반토막이 났어요.”

임금 삭감

임금 삭감을 못 이기고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떠났다. 예전 300명 수준에서 이제 150명만 남았다.

이뿐 아니라 “출동하는 차량도 자신이 구입해야 하고, 차량에 부착하는 애니카 스티커도 개인 부담입니다. 통신비, 유류비 모두 우리 부담입니다. 4대보험도 안 됩니다. 현장에 출동해 사고 처리를 하다 보면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치료비도 한푼도 안 나오고 입원하면 수입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정창원 애니카 지부 사무국장)

그래서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 노조를 결성했다. 회사가 없애 업무우선배정을 돌려줄 것과 지난 10년 동안 결경된 건당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삼성화재가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고, 출동차량, 유류비, 통신비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삼성화재에 물어봐야 한다’,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대체인력을 모집하고 있다고 한다.

삼성화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좋은 회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그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더 나쁜 삶’을 강요하고 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투쟁에 나선 삼성화재애니카 노동자들의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이재환



특수고용 노동자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장우성

특수고용 노동자는 법률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다. 실제로는 사용자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보통의 노동자들과 같은 조건에 있다.

1990년대 불황으로 기업주들이 노동유연화를 추구하며 비정규직을 크게 늘릴 때,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대거 늘어났다.

최근 경제 위기 하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특수고용 노동자는 250만 명에 이른다. 전체 취업자의 9퍼센트로 11명 중 1명 꼴이다.

또한 덤프트럭, 화물차, 택배, 셔틀버스, 퀵서비스, 대리기사, 배달앱 노동자, 학습지·방과후 교사, 보험설계사, 간병사, 철도 매점 노동자, 경마기수, 재택집배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

기업주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업자 간 계약을 맺는다. 이로써 산재·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장비(건설기계, 화물차 등)의 구입·유지·보수 비용을 노동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 또, 일감을 놓고 노동자 사이에 경쟁을 부추겨 노동조건을 악화하



문재인의 약속 파기에 항의하며 싸우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는 데 이용한다.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노골적으로 방해해도 위법이 아니고, 단체행동을 '불법'으로 몰아 탄압하기도 수월하다. 이렇게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은 채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해 왔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0년 넘도록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지

만, 정부와 기업은 완강히 거부했다.

문재인 정부도 대선 공약으로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를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 교사, 공무원, 특수고용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등의 노동3권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을 제약하지 말라고 거듭 권고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ILO 협약 기준을 논의하자더니, 해고자·실업자의 제한적인 노조 활동 허용 외에는 제대로 내놓은 것이 없다.

그래 놓고는 오히려 ILO 협약 기준에 준하는 '사용자 대항권'도 인정해야

한다며 노동법 개악안을 논의하고 있다.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 등 하나 같이 투쟁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다.

경사노위 논의를 반영했다는 노조법 개정안(한정에 대표발의)에도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은 간데없고, 오히려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

정부는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에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포함했고, 일부 업종의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적용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노동자들에게겐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성을 인정하면 당연히 뒤따르게 될 이런 조치들을 '직종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적용하겠다'는 것은, 결국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지는 않겠다는 정부 방향을 보여 주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이처럼 선별적인 조치로 노동자들이 분열해 투쟁이 약화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려면 정부와 사용자에 맞선 투쟁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현장에서 사용자에 맞선 투쟁을 강화하며,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도 이어 나가야 한다.

건설기계노동자(특수고용)

“하루 열 시간 일해도 월 200만 원도 못 법니다”

박재순 건설노조 서울북부건설기계지부 동북지회장

4월 13일 건설기계 노동자 1만 명이 하루 파업을 하고 서울로 집결한다. 4.13 특수고용 노동자 총궐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원래 건설사 정규직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기업주들에 의해 특수고용 노동자로 내몰렸다.

2001년 레미콘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끝에 건설기계 노동자로서는 처음 노동조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 해지로 탄압했다.

2004년 덤프 노동자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에 나섰다. 2005년에는 4차레나 파업을 하고 덤프트럭을 동원해 격렬히 싸웠다. 그 결과 덤프 노동자들을 위협으로 내모는 과적법을 바뀐 냈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싸우면서 '노동자'임을 자각했다.

2007년 전국건설노조를 만들고,

2007년 6월에는 덤프 노동자 1만여 명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마포대교를 점거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쉽게 양보하지 않았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노동자임을 부정당한 채 열악한 현실을 강요받고 있다.

25톤 덤프기사인 조합원은 “하루 10시간 이상 한 달을 꼬박 일해도 임대료(임금) 1000만 원 중에 40퍼센트를 유류비로 지불하고, 할부금 260만원에, 보험료·차량수리비 등을 빼면, 월 200만 원 벌어도 힘들다” 하며 한숨을 내쉰다.

최근 건설노조가 20~30대 청년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5퍼센트가 임금 체불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노동자들처럼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도 없다.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다.

임금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면, 노동기본권을 쟁취해야 한다. 노동기본

권을 인정받고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싸우면 현장별, 지역별로 불균등한 상황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어 더 좋다.

그러나 노조의 교섭 요구를 사측이 거부하는 일도 빈번하다. 역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다. 따라서 건설기계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은 조건 개선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오는 6월 그동안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거듭 권고해 온 ILO(국제노동기구) 창립 100주년 기념 총회에 가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하루 투쟁만으로 노동기본권을 쟁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4월 13일 총궐기를 시작으로 투쟁을 확대하며,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제대로 힘을 발휘한다면 정부와 기업주들을 물러서게 만들 수 있다.

**19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막시즘 2019

**8월 22일(목)~25일(일)에
서울에서 열립니다**

주최: 노동자연대

문의 :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marxism@marxism.or.kr

www.marxism.or.kr